

에너지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내실화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김 현 제



최근 전력수급 안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국내 수요관리 투자사업은 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를 중심으로 해당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효율 향상, 수요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하에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13년까지 3년간 국내 수요관리사업비로 약 1조 500억원이 투자되었고 일정부분 에너지절감 및 효율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을 내실화하여 신성장동력으로써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효율향상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효율향상분야에 투자된 사업비는 지난 3년간 약 1,400억원으로 동기간 전체 수요관리사업비의 13.7%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의 사업비는 부하관리 분야에 집중되었다. 둘째, 효율향상사업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가정·상업부문에 대한 사업 발굴이 미흡하다. 대부분 기기교체 중심으로 공급자 자체 효율개선사업까지 포함하는 경우로, 산업부문의 사업비중이 높는데 반해 가정·상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다. 셋째, 수요관리사업 성과의 측정·검증(M&V) 및 평가체계가 아직은 상당히 취약하다. 자체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제3자 실적 검증이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각 사업별 M&V 방법론에 대한 평가 및 인증체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시금 수요관리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국내 수요관리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효율향상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 다양한 사업기회 발굴을 위한 외부 수요관리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투자사업에 대한 M&V 및 평가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먼저 효율향상분야에 대한 투자비중과 규모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관리사업의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투자비 또한 직전년도 규모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공급자 자체만으로는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에 한계가 있으므로 ESCO사업자, 컨설팅업체 등 외부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기회 발굴의 가능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로, 개발된 방법론을 전문기구를 통해 심의하도록 하고 이를 DB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수요관리 사업에 대한 M&V 및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수요관리사업은 그 잠재 가치가 여전히 매우 높은 분야이다. 그동안 효율향상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정·상업 및 중소기업에서도 수요관리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에너지효율시장이나 배출권거래시장과 같은 여타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수요관리사업자, 지자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경우 지지부진하던 효율향상분야 투자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수요관리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수요관리정책 기반을 다지고 수요관리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